

송영길 구속... 민주, 수사 과정 예의주시

지도부 "이미 탈당한 사람" 친명, 야당 탄압론 제기 비명 "비대위 전환해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민주당은 향후 검찰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계파별로 시선은 갈렸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되며 비대위 전환을 재차 촉구했고,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 공화국의 한 단면"이라며 야당 탄압론을 폈다. 지도부는 "이미 탈당한 사람"이라며 거리를 뒀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다음날인 19일 민주당은 논평 등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지금 기소가 돼서 곧 재판에 들어갈 텐데, 좀 더 지켜볼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계획이나 의원총회 등에서 내부 논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해당 의원들의 이름만 거론했을 뿐 수사 기관에서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다"며 "정확히 확인된다면 그때 지도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주류는 검찰을 저격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인 19일 구속됐다.

검찰 정권의 정치탄압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5선 안민석 의원은 이날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구속까지 할 사안이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도 될 것 같은데, 역시 검찰 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 사건의 흐름을 쫓

아면 핵심은 윤석열 정권 검찰 공화국이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둔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비명계는 송 전 대표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며 당 지도부의 사과와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 대표

를 뽑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고, 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미 탈당한 전 대표가 구속된 것에 불과하니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먼저 우리 민주당이 도덕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 길은 통합비대위"라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민중 윤준병 의원, “폭력·음주운전 등 장관 덕목에 미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답변한 ‘고위공직자의 덕목’에 모두 미달되는 부적격한 인사”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강도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등 총 5,000만원 이상의 모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보완 신고를 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냐는 의혹과 함께, 2009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2006년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의 도표와 사진, 본문 등을 인용 없이 반영해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자기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강도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전문성·선공후사의 자세·조직 관리역량·청렴성 등을 꼽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강 후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아 도덕성·청렴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라며 “폭력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누락·자기논문 표절·부당 소득 공제 등 본인이 뽑은 장관의 덕목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가 꼽은 선공후사의 경우, 후보자는 4년 임기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올해 2월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개월 만에 원장직을 내려놓았다”며 “이로 인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개인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도형 후보자의 책임감 없는 자세를 비판했다.

이어 윤준병 의원은 “강 후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1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윤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가 꼽은 선공후사의 경우, 후보자는 4년 임기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올해 2월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개월 만에 원장직을 내려놓았다”며 “이로 인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개인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도형 후보자의 책임감 없는 자세를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가 꼽은 선공후사의 경우, 후보자는 4년 임기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올해 2월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개월 만에 원장직을 내려놓았다”며 “이로 인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개인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도형 후보자의 책임감 없는 자세를 비판했다.

또한, 후보자는 2023년 재산신고서에서 약 1,000평이 넘는 토지(임야)와 예금

실제, 강도형 후보자는 지난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1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윤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가 꼽은 선공후사의 경우, 후보자는 4년 임기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올해 2월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개월 만에 원장직을 내려놓았다”며 “이로 인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개인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도형 후보자의 책임감 없는 자세를 비판했다.

“송영길 돈봉투 경선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비명계 원외모임’ 민주당의 실천행동, “민주당, 반성의 모습 보여야”

비이재명(비명)계 원외 모임 '민주당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은 19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건 구속과 관련해 민주당이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의 돈봉투 경선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다.

자금과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라며 "구속에 이르기까지 송 전 대표를 '구속에 이르기까지 송 전 대표의 잘못을 누우치기는커녕 검찰탄압 프레임'을 내세우는 뻔뻔함을 보였고, 스스로 검찰에 출도하는 퍼포먼스로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송영길의 돈봉투 경선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송영길이 대선 후보 경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대선패배 후 송영길은 직접 자신의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상납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실천행동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19일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 자신의 대표 경선에서 돈봉투를 살포했고, 외과 조작을 이용해 정치

이어 "민주당 역시 반성할 몫이 적지 않다"며 "이미 탈당한 송영길의 범죄혐의에 대해 민주당 당원, 지지자, 원외인사, 그리고 스피커들은 침묵하거나 불명치한 정치공세에 편승

구를 받아 사법리스크의 방탄복을 갖춰 입은 이재명 대표의 보은을 민주당이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닐까 가뭇겨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지나친 오프라민 민주당이 오늘부터 송영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느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를 받아 사법리스크의 방탄복을 갖춰 입은 이재명 대표의 보은을 민주당이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닐까 가뭇겨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지나친 오프라민 민주당이 오늘부터 송영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느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송 전 대표 구속 관련 당 차원의 입장을 묻자 "지금은 탈당해서 개인의 몸이다.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없다"며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될텐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뉴스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시 예산 1조454억원 확정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행정 사항 총 60건(시정 20건, 주의 45건, 개선 41건, 권고 184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35일간의 긴 회기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내년도 김제시 예산은 일반회계 9,704억 원, 특별회계 750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9,934억원) 대비 5.23% 증가한 총 1조454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제=곽태 기자

특히 지난달 16일부터 24까지 9일간의 김제시 분청, 사업소 등 38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임실군의회 정례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19일 제333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서에는 24개 부서 및 3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시정 6건, 처리 40건, 건의 45건 등 총 91건의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담겨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 예산안, '임실군의회 스토리텔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했다. 이날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또한, 2024년 예산안은 내년도 교부세를 비롯한 국비 대폭 감소에 따른 군의 예산 절감 편성 기조에 따라 총 5,012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에너지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 모색

도의회 균형발전정책연구회 권익현 부안군수와 정책간담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방문 산업적 파급효과 등 청취해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부안군을 방문해 권익현 군수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회의실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대표 최형열 의원·전주5) 9명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부안군을 방문해 군수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방문해 에너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현지 활동을 전개했다.

회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정기(부안) 의원은 "부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으로 이런 원인으로 기업들이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고른 분배를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해야만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을 청취하고 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최형열 의원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집행기관이자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소 및 2차전지 등 미래 에너지를 이용한 기업 유치에 통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이날 부안군에 방문한 최형열(전주5)·김희수(전주6)·김동구(군산2)·염영선(정읍2)·윤수봉(완주1)·전용태(진안)·윤정훈(무주)·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 소속 의원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통해 지역균형을 도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요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의 인구유출은 심각하며 부안 역시 매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기업유치 및 산업 발전을 통해 인구 유입요소를 구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부안군의 현재와 미



도의회, 결핵 퇴치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9일 의장접견실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검진 및 기술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방의정부서상을 수상받은 정읍시의회 이만재(시진 왼쪽) 의원과 정상철 의원.

이날 전달식은 국주영은 의장과 대한결핵협회 임원 전북지부 회장과 마대일 전북지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만재·정상철 정읍시의원, 지방의정부서상 수상

성금 전달은 매년 결핵퇴치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seal) 구입과는 별도로, 도내 의료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대한한국시도의회장협의회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2022년 기준 전북 지역 결핵환자는 812명으로 발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과 비교 시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결핵에 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 이만재 의원과 정상철 의원이 지난 18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부서상을 수상했다. 이만재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이 필요한 일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쓰겠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더 나

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철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안전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녹색성장이 가능한 자립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 문화 예술이 생소한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정읍시가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